

연체이력 정보 공유제한 관련 비조치의견서

비조치의견서 (■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담당자	담당부서	디지털금융 감독국	담당자 (직위, 성명)	선임조사역 이재원	연락처	02-3145-7149
요청대상 행위	<div><input type="checkbox"/>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영업제한, 소득감소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채무 연체로 인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점수 하락, 금융거래 조건 악화 및 대출 거절 등 금융접근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으로</div> <div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위기극복 및 위기 이후의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위해 일시적 연체를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신용회복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</div> <div><input type="checkbox"/> 이에 '21.8.11. 금융위, 금감원 및 금융권은 간담회를 통해 ①코로나19 기간중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된 경우 해당 연체이력의 금융권 공유 및 CB사 신용평가 활용을 제한하고, ②전 금융권은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관리시 연체이력 공유·활용 제한 등의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 하였으며</div> <div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8.12. 각 금융협회·중앙회,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는 「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」을 체결하였음('21.10월 중 시행 예정)</div> <div><input type="checkbox"/> 동 협약에 따라,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'20.1.1.부터 '21.8.31.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'21.12.31.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나,</div> <div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이러한 신용회복 지원활동은 신용정보법 제18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정확성·최신성 유지 의무 등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비조치 등 행정적 지원방안이 필요</div> <div>금융권의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방안 주요 내용</div> <div><div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'20.1.1.~'21.8.31. 기간중 발생한 소액연체를 '21년말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금융권 상호 간 공유를 제한② 신용정보회사는 연체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코로나19 피해자의 연체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음③ 신용정보원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의 연체이력정보 공유를 제한④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이력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 하더라도 금리·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며, 코로나19라는 일시적 요인을 감안하여 개인·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 등</div></div>					

판단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른 소액연체자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감독당국과 금융권 간의 합의 내용에 따른 신용회복 지원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고자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0.1.1.~'21.8.31. 기간중 발생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 중 2021.12.31.까지 전액 상환(채무자 변제 및 보증인 변제를 포함)된 개인·개인사업자 채무 등에 대해 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가 해당 채무자의 연체이력정보를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제52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면책하는 한편 ○ 금융회사가 동 지원방안에 따라 신용평가를 실시하여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
판단이유	<p><input type="checkbox"/> 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</p> <p>제4조(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)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·개별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3.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<p>제5조의3(직권에 의한 법령해석·비조치의견서 제시) ① 금융당국은 신청인의 요청없이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유사한 유형의 법령해석·비조치의견서 요청이 있어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.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